

민생 외친 文 “3차 지원금, 104만 일자리”… 부동산은 사과

(취약계층)

주거 문제 국민들께 매우 송구
공급 확대 등 안정책 조속히 마련
경제 성장 회복 수출부문 활약 커
자영업·소상공인 격차 좁혀 보답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 5년 차에 밝힌
올해 경제 회복 구상은 ‘민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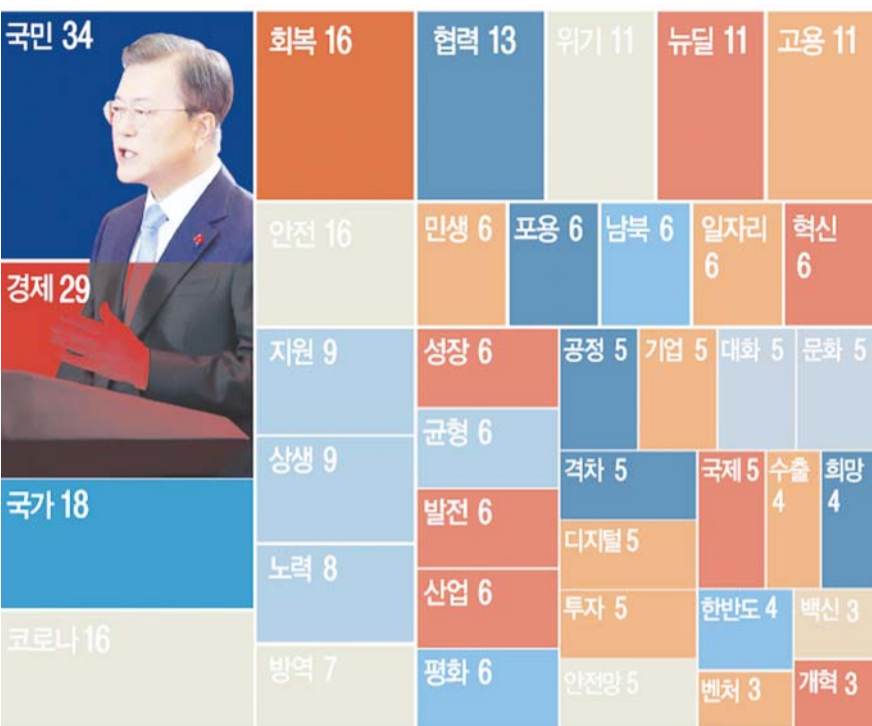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돌봄 종사자 등 취약 계층에 필요한 지원책 마련을 강조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본관에서 밝힌 신축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경제’를 29번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올해 위축한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 관련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이 밝힌 ‘민생 경제’ 회복 방안은 ▲코로나19 피해 업종·계층에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청년·어르신·장애인 등 취약 계층 위한 ‘직접’ 일자리 104만개

文 대통령 신년사 키워드



/뉴스시스

조성 ▲국민취업제도 시행 및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다.

문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코로나19 위기로 깊어진 격차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한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 출발했다. 이후 플러스 성장으로 회복한 시점은 지

난해 3분기였다. 한국 경제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선 데는 수출 부문의 활약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1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치)’에 따르면 수출은 전기 대비 16% 성장했다. 이는 1986년 1분기(18.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된다.

문 대통령 역시 이날 신년사에서 수출

부문 성장을 경제 회복 이유로 꼽았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수출 부문 성장과 관련 “자동차 생산량은 지난해 세계 5강에 진입했고, 조선 수주량은 세계 1위 자리를 되찾았다. 정부가 역점을 두어온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3대 신산업 모두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보이며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문제는 ‘민생’ 부문이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주요 기업의 성장 못지않게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에서도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문 대통령은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경제와 관련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불편을 참고 이웃을 먼저 생각해주신 국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격차를 좁히는 위기 극복”으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민생 부문과 관련 부동산 이슈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 주거 불안정’ 현상이 생기면서다. 신년사에서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 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문 대통령은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인도네시아 포괄적동반자협정(CEPA)’ 등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 교류·협력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에 대한 적극적인 가입 검토 의사를 밝혔다. 수출 부문 성장 차원에서 외국과 교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1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을 찾은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與 “입법 뒷받침할 것”…野 “눈 감고 귀 닫아”

더불어민주당

“포용국가 도약 최선 다할 것”

국민의힘

“민심·정세변화에 동문서답”

여야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했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 신년사를 지지하며 당 차원의 적극적인 입법 뒷받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으로 혁신적인 포용국가 도약 구상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은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혁신적 포용국가 도약을 위해 한국판 뉴딜 추진’ 구상을 밝힌 데 대해 입법 과제 실현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소프트파워에서도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힌 것과 관련 “문화강국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대북정책”도 ‘코로나 극복’도 이제는 국민과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 신년사에 대해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동문서답’, ‘세상과 민심, 정세변화에 눈 감고 귀 닫은 신년회견’이라고 혹평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코로나

19 백신 개발과 관련 ‘드디어 터널의 끝이 보인다’고 한 데 대해 “백신의 봄을 기다리는 국민들은 여전히 어두운 터널 속에 있다. ‘백신 자주권’보다 시급한 것은 지금 당장 맞을 수 있는 백신 확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을 언급하며 추진하기로 한 직접 일자리 104만개 창출과 관련 “효과 없는 단기 알바 일자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도 30조5000억원의 국민 혈세로 또 다시 104만개 만들겠다고 하는가”라며 반문했다.

한편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 신년사를 두고 “대한민국 공동체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코로나 19를 극복하고자 한 문 대통령의 의지에 동의한다”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경제단체들, 일제히 경제회복 ‘공감’ “기업도약 발목잡는 규제 개선 절실”

대한상의 “낮은 규제, 제도 개선”
중기중앙회 “개성공단 재개해야”
경총 “규제 완화해 기업 氣 살려야”

경제단체들은 ‘회복’, ‘포용’, ‘도약’ 등이 담긴 문재인 대통령의 11일 신년사에 대해 일제히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속가능한 경기 부양책 등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올해 국정운영의 목표를 ‘코로나 이전 회복’과 ‘선도국 도약’, 그리고 ‘취약부문 포용’에 둔 것은 적절한 정책방향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대한상의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신사업 의욕과 경제활력 진작이 관건인 만큼 이를 위해 낮은 법제도를 일대 혁신하는 한편, 자산시장 과열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코로나 피해가 큰 중소기업 등 실질부문에 충격이 나타나지 않도록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특히 포용기반 확충을 위해 해선 성장기반 확충이 병행돼야 하는 만큼 보편선거 등의 정치일정에 흔들림 없이 성장기반 확충에 각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중소기업계도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상생과 포용, 새로운 도약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신년사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21년에도 불확실한 경제환경 속에 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절실하다”면서 “중소기업의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해 3월말 도래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만기 연장과 코로나 피해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방식 개선,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속 집행과 함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경기부양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 확대도 주문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신남방, 신북방 국가들과의 교류·협력 확대와 CPTPP 가입 검토로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늘리고, 남북간 평화와 상생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개성공단 재개 등 경제협력 논의도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에서 “코로나19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내적으로는 기업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 법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입법화돼 우리 기업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최악의 상황”이라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업들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들의 기(氣)’를 살리는 것으로 이를 위해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승훈 기자 bada@